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성 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60년에 55세였던 평균수명은 1990년에는 71세로 연장되었고 2000년에는 74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리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전인구에 대한 비율은 1960년의 3%에서 1990년에는 5%로 되었고 2000년에는 7%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 바야흐로 한국사회도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의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서 보다는 전반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의 미비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개인이나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사회는 2000년에 진입하게 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00년대까지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욕구는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다양해지고 여생기간의 연장될 것이나 노후에 대한 개인적 대책은 미흡하게 될 것이다.

가족적 차원에 있어서는 가족원 수가 평균 3명 정도로 감소하고,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율이 크게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취업과 사회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고, 또한 자녀의 노인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동시에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의 근거도 희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는 국민소득은 크게 향상되지만 공적노령연금(국민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은 기대할 것이 못하고, 고령화로 유병장수하는 노인이 많아져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노인주택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인적, 가족적 및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인문제의 양상은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여가문제 (4)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모든 노인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방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까지의 노인복지 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노인복지의 대상 : 노인복지의 대상은 저소득층 중심에서 노인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여 노인복지의 대상을 줄이고 노인문제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 (2) 노인복지의 서비스 및 수준 : 노인복지 서비스는 우선 최저한도 생계보장을 달성하고, 노인의 자기부담 의료비를 절감해주고,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부조를 지급하고, 노인전용주택의 공급과 임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간호보호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간호사 서비스, 간병인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3)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행정체계 : 노인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훈련하여 노인복지 전문업무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응하는 서비스는 실버산업(시장에서 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노인복지의 재정 : 앞으로 국민소득의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재정능력이 향상될 것이므로 노인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여가야 할 것이다. 1994년 현재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년 막대한 액수로 조성되고 있는 노령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을 노인전용주택, 노인복지 시설, 노인 휴양시설 및 기타 실버산업 등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기금의

부족분은 민간의로부터의 공동모금으로 활성화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5) 개인적 준비에 대한 의식화 및 여건 조성
: 노인문제의 책임의 상당부분은 개인이 미리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하지 못한 데 있으므로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계몽하고, 준비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여건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